

광주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고용 13만명 효과”

정부가 광주와 울산, 경기 시흥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인공지능(AI)과 수소,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의 거점으로 삼아 투자·생산과 고용 등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기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유위)를 개최해 광주·

울산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알테드로겐 오토밸리, R&D 비즈니스 밸리 등 수소 선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과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시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은 미개발지를 지정해 기반을 조성한 이후 기업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친 재원 투입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일부 개발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국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 8조3000억원, 생산수발 23조2000억원에 부가가치 유발 8조7000억원, 12만9000명의 고용 유발 등을 전망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유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와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

광주-AI·울산-수소·시흥-무인이동체...총 8개 지구 ‘성과부진’ 광양만권 울촌3산단은 ‘자유구역 지정 해제’

울산·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과 광양만권 울촌3산단 개발적 지정해제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새롭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총 9.951km² 규모로 광주(4.371km²)·울산(4.70km²)·시흥(0.88km²) 등 3개 지역의 8개 지구다.

우선 광주는 AI융복합지구,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I·II 등 AI 중심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부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울촌3산단은 지정이 해제됐다. 경자유위 는 울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지난 4월 경자유위에서는 이미 울촌3산단의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울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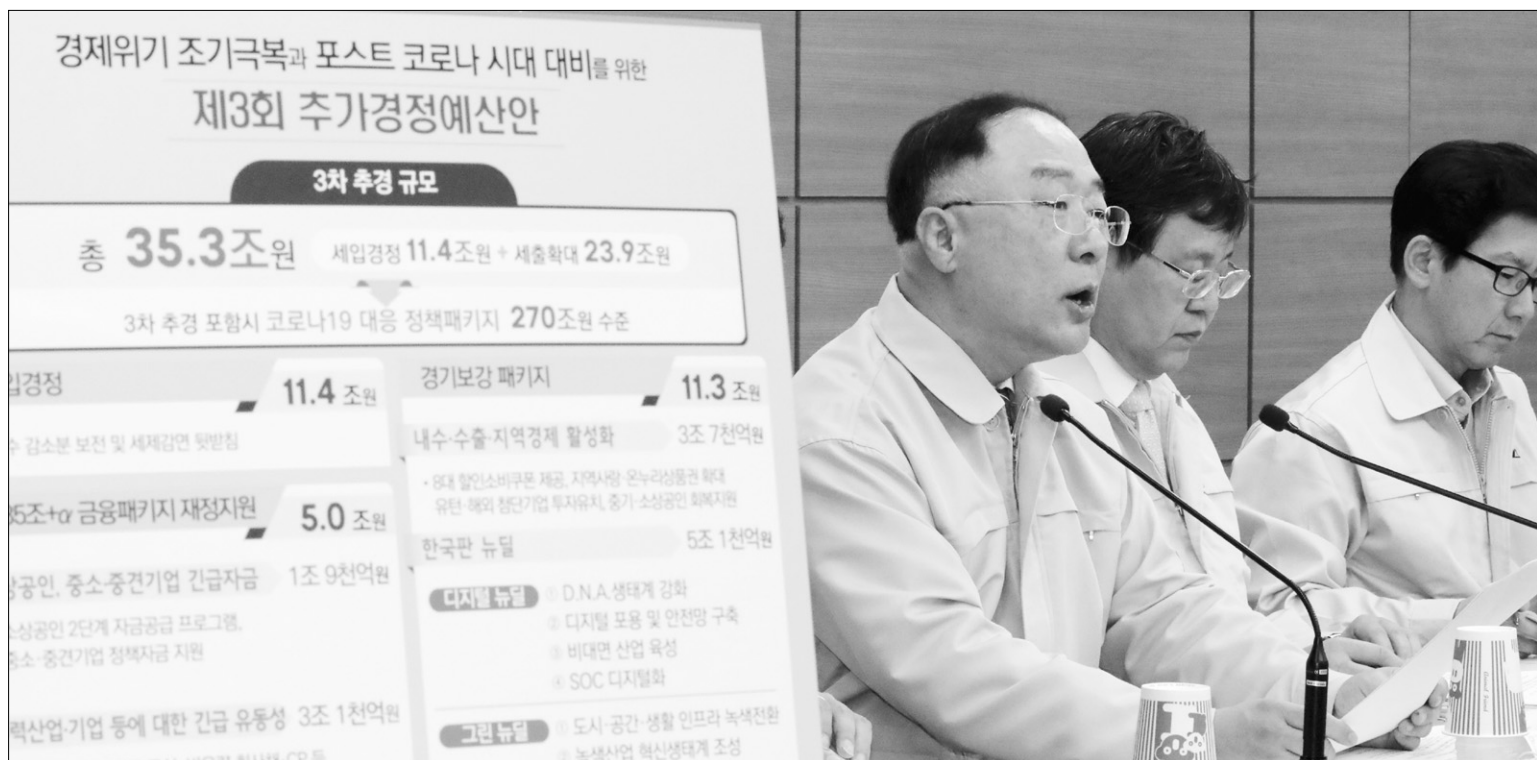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 특례를 경자유역에 전면 허용하는 규제 혁신 △해의 첨단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임대료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개선 △국가 산업·지역 정책과 경자유역 중점산업간 연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올 하

반기 내에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면서 “특히 광주·울산·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 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호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방점 ‘청년 일자리’...IT 일자리 15만개 창출

간접 일자리 확대 아닌 즉시 공급되는 ‘직접 일자리’ 마련 AI 학습용 데이터 입력 등 21세기 지능형+노동집약형 일자리

정부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를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입력, 빅데이터 가공을 위한 데이터 정제 작업 등 지능형이면서도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비대면·디지털 업무’ 일자리를 확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실직 위험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단순 소모성 토목공사가 아닌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21세기 지능형 산업’을 위한 재정과 인력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추경에서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확보되는 일자리는 총 15만개다. 이중 5만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로 별도 배정했다. 아울러 청년 5만명에게 ‘일경험’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명에 대한 채용보조금도 지급한다.

우선 10만개 일자리가 확보되는 비대면·디지털 분야는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 15~40시간 일하는 조건이다. 근무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사

공공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계획		
구분	비대면 정부일자리	실직자 일자리
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명 / 1.5조원	30만명 / 1.5조원
공공데이터 구축	방역·환경보·행정지원	방역·환경보·신원관리
주 15~40시간	최장 6개월·최저임금 수준	주 30시간 미만
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
5만명 / 0.5조원	5만명 / 0.24조원	5만명 / 0.32조원
콘텐츠 기획·관리, IT교육 등	채용여력 부족 사업장	특별지원업·이직자
최대 180만원씩 6개월	월 80만원씩 6개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회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클라우드 소싱(집단 참여)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구축에 2만명을 채용하는 등 17개 부처에서 10만개 일자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데이터 구축사업은 최근 청년층이나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색 일

자리’이기도 하다. 민간 기업에서도 애플리케이션(앱)과 컴퓨터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도 않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채널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제된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음성 듣고 감정 고르기 △시식인 요약 △유명인 관련 △중복 제품 이미지 체크 등 다양한 데이터 입력 종류가 존재한다. 또 지도나 상권분석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해당 상권의 △시장 간판 △전경 △음식 등을 직접 촬영해 업로드하는 식이다.

SK텔레콤 누구, 카카오, 네이버 파파고 등 이미 민간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과 가공, 활용 등에서 다양한 데이터 입력,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제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빅데이터의 예측, 분석력이나 AI의 판단력도 향상된다.

정부는 전자정부와 발달된 ICT 인프라를 통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이번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가공하는 작업을 ‘뉴딜’로 진행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일자리에 숨통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한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이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직할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률적 분양권 전매금지 지방 미분양 더 심화 우려”

주택협회, 지난 1일 국토부에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주택협회가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지방 미분양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5·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登記일까지 연장한다.

또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4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으로 늘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 국토부는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협회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투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역마다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지방 미분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

양의 89.7%인 3만2846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지방의 미분양 비중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83.7%)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로 지방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지방광역시와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보다 길어지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심지어 미분양 관리지역까지 적용을 받아 규제의 적정성에 위태된다고 했다.

협회는 전매제한 강화가 청약 과열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다른 부동산 정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면 비규제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코로나19 진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제도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추 5개월 저장기술 개발...“폐기물도 크게 감소”

세계김치연구소·농진원 연구팀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주원료인 배추의 저장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팻릿단위 CA 저장시스템(PUCA, Pallet unit controlled atmosphere)’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CA 저장기술은 저장고의 기체환경을 조절, 농산물의 호흡과 생리작용을 억제해 저장기간을 연장하게 만든다.

공동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을 월동배추에 적용해 최적의 기체환경 저장조건을 규명, 품질 유지기간을 일반 저온저장고 3개월에서 CA 저장시스템을 통해 최대 5개월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배추를 150일간 저온(0도)저장할 경우, 배추 저장장해와 부패가 가장 적은 최적조건(기밀컨테이너 내부의 산소 농도 2±0.5%, 이산화탄소농도 5±1%로 유지)을 확인했다.

기존 기체조절 없이 저온저장한 배추

결외의 수분함량이 저장 초기대비 6.5% 감소했지만 CA 저장배추는 1% 미만으로 줄었다. 배추의 중량감소율도 저온저장 배추는 16.5%까지 증가했으나, CA저장 배추는 3%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선순실물(김치 제조에 이용할 수 없는 배추 결외와 부패부위를 제거한 후 중량변화를 백분율로 환산) 역시 저온저장 배추에 비해 약 12% 절감됨에 따라 김치 제조업체의 배추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CA저장 배추의 경우, 가용성 고형물 함량, 색도도 저장 초기수준을 유지했고 항암성분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저온저장 배추에 비해 186%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이성현 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팻릿단위 CA 저장시스템은 시설형 CA 저장고보다 초기 설치비와 유지비가 저렴하다”면서 “앞으로 김치제조업체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에 보급해 계절별 배추 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